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

(조남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3. 6. 28.

발의자 : 조남진·서종수·한일용
유동균·박영길·마동환
김수진의원(7명)

1. 주 문

최근 일본 하시모토 두루 오사카 시장이 “일본군 위안부가 당시에 필요했다”는 등의 잇단 위안부 정당화 망언으로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태평양 전쟁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신사에 “내각총리대신” 명의로 공물을 봉납하고, 일제의 군국주의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망언을 하며, 일본 부총리를 포함한 일부 각료들과 168명의 국회의원들이 야스쿠니신사를 집단 참배한 것에 대하여 부적절한 망언과 망동으로 규정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함.

2. 제안이유

- 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있으나 일본정부는 이를 거부한 채, 일본 각료들과 국회의원들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등 과거사를 부정하는 만행이 계속되고 있음.
- 나. 이에 마포구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며, 일본 총리의 일제 군국주의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망언과 일본 각료 및 국회의원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하여 일본 정부의 사죄표명과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함.

3. 이송처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외교부,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서울특별시청,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로 국제법상 인도주의에 반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서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있으나 일본정부는 이를 계속해서 거부한 채, 대한민국과 중국 등 아시아 여러 나라의 무고한 국민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참한 고통을 주고 있다.

최근 일본 하시모토 두루 오사카 시장이 “일본군 위안부가 당시에 필요했다”는 등의 잇단 위안부 정당화 망언으로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지난 4월 21일과 23일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도조 히데키 전 총리를 비롯한 태평양 전쟁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신사에 “내각총리대신” 명의로 공물을 봉납하고, 일제의 군국주의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망언을 하며, 일본 아소 다로 부총리를 포함한 일부 각료들과 168명의 국회의원들이 야스쿠니신사를 집단 참배하는 망동을 하였다.

이에 마포구의회는 일본 정부의 잘못된 역사인식에서 기인된 부적절한 망언과 망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마포구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적 조치를 신속히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마포구의회는 일본 정부가 성노예로 인권을 유린당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책임 있는 조치를 신속히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마포구의회는 일본 총리의 일제 군국주의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망언과 일본 각료 및 국회의원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하여 일본 정부가 깊이 반성하고 진심어린 사죄를 조속히 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마포구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총리의 망언과 일본 각료 및 국회의원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 과거 군국주의로의 회귀 움직임에 대하여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여 국제사회와 함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 6.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일동